2026
논리논술
megastudy
장진석 논술

step 3

합격답안 실전논술

1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 [논리논술 3]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답을 쫓아 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집에 돌아가 누우면 나는 어떤 표정 지을까
슬픔은 손 흔들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저 어디쯤에 서 있을 텐데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은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 보면은 슬픔 아는 빛으로 피어
나는 나를 미워하고 그런 내가 또 좋아지고
자꾸만 아른대는 행복이란 단어들에 몸서리 친 적도 있어요
저 봐 손을 흔들잖아 슬픔이여 안녕
바람 불었고 눈비 날렸고 **한 계절 꽃도 피웠고** 안녕 안녕
구름 하얗고 하늘 파랗고 **한 시절 나는 자랐고** 안녕 안녕
– 잔나비 슬픔이여 안녕

논제 1

50분

공정하다는 착각

_ 숙명여대 모의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3] 1강

문제 1 **<가>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관점에서 <나>와 <다>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00±30자)**

문제 2 **<가>의 논지와 <다>를 활용하여 <나>의 '능력주의 쿠데타'를 평가하시오. (600±60자)**

〈가〉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정의론 에서 '네 가지 사회 체제'를 제시했다. 이를 교육과 연관하여 해석해 보면, 교육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망할 수 있다. '자연적 귀족 체제(natural aristocracy)'는 재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혈통을 기반으로 하는 세습적 특정 신분에만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의 계기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체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자연적 자유 체제(natural liberty)'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자유 시장 논리에 입각한 효율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 체제에 해당한다. 이 체제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liberal equality)'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조건에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을 추가한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됨'을 '공정한 기회균등'으로 해석하는 이 체제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가정환경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제도 등을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체제는 여전히 자유 시장 논리에 토대를 둔 '효율성 원칙'과 결합하여 있으므로, 선천적 지능이나 재능과 같은 타고난 우연성에 의한 사회·경제적 불

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롤스에 의하면 설사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의 타고난 재능과 그 재능을 계발하려는 노력에서조차도 우연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democratic equality)'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 원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연성에 의해 산출되는 이익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방식, 즉 차등 원칙을 통한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는 '효율성 원칙'에 기초하여 주로 절차적 공정성만을 추구하므로, 우연성으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데 비해,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 차등 원칙을 적용한다. '차등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만 정당화된다는 원칙이다.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통해 경쟁에서 초래된 교육의 성과가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과도하게 전이되어 불평등을 초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능력주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사회 제도를 요구한다.

〈나〉 제임스 코넌트(James B. Conant)가 본 1940년대 미국 사회는 세습 상류층이 행세하는 세상이었다. 그는 세습 엘리트 체제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상에 반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세습 엘리트 체제가 무너지고 능력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 시도는 '능력주의 쿠데타'라고 불릴 수 있다.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명문대학이 '가장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하여 사회 지도자로 만드는 능력주의 기관'이 되어야 했다. 코넌트는 실력 있는 고등학생들을 발굴하여 엘리트 대학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서부 공립학교에 '하버드 장학금'을 마련하고, 타고난 지능만을 보고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했다. 학업성취도평가(SAT)라고 불리는 이 선발시험은 1차 세계대전 동안 미 육군에서 시행한 아이큐 테스트와 유사한 것이었다. 코넌트의 장학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학업성취도평가는 결국 전국의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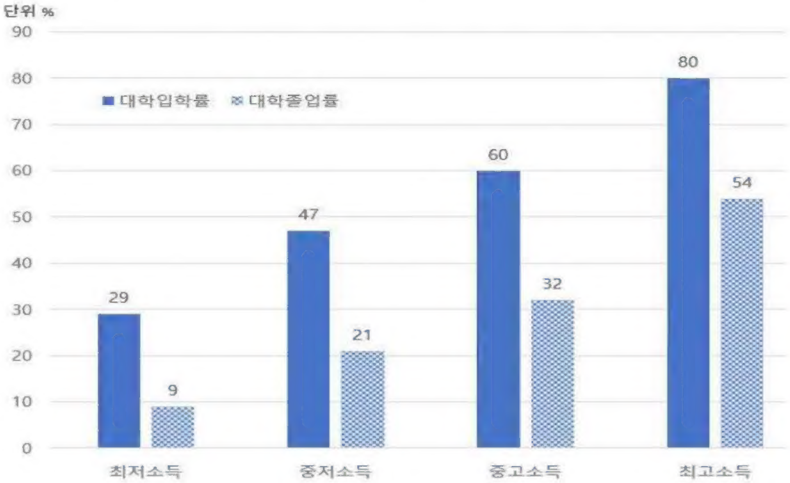
하버드 대학교를 능력주의 기관으로 바꾸려는 코넌트의 시도는 미국 사회를 능력주의 원리에 기반해 재구성하려는 야심 찬 기획의 일

부였다. 코넌트는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한 교육'을 제시하면서, '세습 귀족정의 발전'에 의해 위협받은 '기회균등의 원리'를 되찾고자 했다. 코넌트는 프레데릭 터너(Frederick J. Turner)가 처음 사용한 '사회 이동성'이라는 말을 '계급 없는 사회'라는 이상을 정의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청년들이 부모의 신분이나 경제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계발할 수 있다면, 사회 이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으며, 교육이 사회 이동성의 도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 <표> 가계 소득수준별 SAT 성적 분포(미국, 2010년)

소득 규모	독해 점수	수학 점수	작문 점수
2만 달러 미만	437	460	432
2만 – 4만 달러	465	479	455
4만 – 6만 달러	490	500	478
6만 – 8만 달러	504	514	492
8만 – 10만 달러	518	529	505
10만 – 12만 달러	528	541	518
12만 – 14만 달러	533	546	523
14만 – 16만 달러	540	554	531
16만 – 20만 달러	547	561	540
20만 달러 초과	568	586	567

<그림> 미국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학 입학률과 졸업률



* 1979~1982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25세까지 졸업한 경우를 반영함.

논제 2

90분

이상과 현실

_ 한국외대 기출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3] 2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2045년쯤에는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AGI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계지능을 말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커즈와일은 오히려 인류의 이상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 주장한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인간적이 되고 더 독특해지며 심지어는 신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커즈와일에 따르면, 디지털 생활이야말로 우주 진화에서 이상적인 다음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마인드를 멈춰 세우거나 노예로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 놓아야만 한다.

- 유희경, 「AI 곧 '인간 지능' 능가」 재구성



(나) **마키아벨리**는 이전의 도덕철학자와 정치철학자를 비판하면서, 가상의 공화국이나 군주정이 아니라 군주가 실제로 활동하는 현실 세계에 관해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이익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실제 모습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권력을 유지하려면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이 신의를 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만책에 능한 인물이었음에 주목했다. 그래서 선보다는 악이 우세한 현실 세계 속에서 국가의 보존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위해 군주는 선과 악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 강정인과 정승현, 「동서양의…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재구성

(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 닫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옳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 곱 십 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옘병헐! 그눔에 경제곈 다 어디루 가 뒈졌어. 독립은 우라진 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궤짝 어깨에 멘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중략]

신기료장수 코삐뚤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신기료장수: 헌 신을 꿰매어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도가(都家): 도매상

- 채만식, 「미스터 방」 중에서

(라) 중국 전한(前漢)의 외척 **왕망**은 젊은 시절 검소한 생활과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로 칭송을 받았다.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면서 명망을 얻은 왕망은 불과 38세에 재상인 대사마가 되어 왕씨 일족을 대표하는 지위에 올랐다. 권력을 잡은 왕망은 기원후 8년에 '선양(禪讓)'이라는 유교의 이상적 왕위 계승 방식으로 어린 황제에게서 천자의 자리를 양보받고, 국호를 '신(新)'으로 바꿨다. 왕망의 꿈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그 방법을 유교 경전인 「주례」에서 찾았다. 관명, 지명 등을 모두 변경하였고, 대토지 소유 제한 및 토지 균등 분배, 노비 매매 금지 등의 개혁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관념적으로 추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에서 힘을 얻기 어려웠다. 결국 대부분의 개혁 정책들이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지방 호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폐지되었다. 기원후 23년, 호족 및 군 내부의 반란과 백성들의 봉기로 신나라는 멸망하고, 왕망도 반군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

- 최준채 외, 『고등학교 세계사』 재구성

(마) 경제학은 18세기 말 그 학문이 출발할 때부터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이었다. 특히 유토피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는 물질적 행복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경제학자들**은 사

람들이 물질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혹은 제도가 어떤 것인지 연구했다. 한 나라의 '부'에 대한 연구인 『국부론』을 쓴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뿐만 아니라, 그의 한 세대 후배들인 맬서스와 리카도도 그랬다. 경제학이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인만큼, 경제학자들도 유토피아를 꿈꾸는 유토피안들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유토피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에 입각하지 않은 유토피아 사상가들과는 명백히 다르다. 위대한 경제학자 마셜의 말처럼 경제학자는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다.

- 김세직, 『모방과 창조』 재구성

(바) 독재정권이 들어선 A국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기근이 지속되고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확산하면서 수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독재정권은 정치 권력 장악에 몰두하면서 기근과 질병 관리는 등한시해 국민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제단체들은 A국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인권보호단체 W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보호단체 W는 A국 어린이의 기아 및 전염병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구호식량과 백신을 현지에 직접 보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A국 독재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단체가 A국에 입국하거나 구호 물품을 보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비판했던 구호단체들은 입국과 모든 구호 활동이 거부되었다. 결국 W는 국제단체들의 요구에 침묵하고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애덤 파이필드, 『휴머니스트 오블리주』 재구성

문제 1

(가)~(라)에서 밑줄 친 인물을 '이상 지향'과 '현실 지향'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인물의 관점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아래 <보기>의 관점에서 (라)의 '왕망'과 (마)의 '경제학자'를 비교 · 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10점)**

<보 기>

Like oil and vinegar, ideals and reality never fully dissolve into one another and tend naturally to separate if left alone. To combine, they need to be regularly stirred up together if they are to make good vinaigrette*. Also, like oil and vinegar, idealism and realism are better together. Each on their own is never enough. A passion for ideals alone will never make a good leader. She or he also needs a gritty** realism to guide them as they try to bring influence to bear in very worldly situations which are usually not ideal at all.

*vinaigrette: 비네그레트(식초에 갖가지 허브를 넣어 만든 샐러드용 드레싱)
**gritty: 불쾌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 3 **(바)의 W가 처한 상황을 '이상'과 '현실'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아래 <보기>에서 언급된 원칙을 준용하여 W의 결정이 왜 타당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80점)**

<보 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하고 특별한 요인들을 고려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1) 목적의 정당성 :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수단의 적합성 :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3) 침해의 최소성 : 침해가 적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법익의 균형성 : 기본권 제한으로 얻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

논제 3 100분

국가의 개입

__ 성균관대 모의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3] 3강

문제 1

(제시문1)~(제시문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만일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 지식,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용어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임을 깨닫는다면 ,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일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다수가 자발성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자기만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점이 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경험의 중심이자, 주관성의 초점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만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어서 우리는 늘 그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각 개인에 내재한 인간성에 일련의 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성을 향해 어떤 태도, 즉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이 인간성에는 이성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욕망이나 충동에도 각자 나름의 특성이 담겨 있으며, 각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충동을 일정정도로 느끼는 것이 위험하거나 크게 나쁜 일이 아니다. 욕망과 충동 역시 신념과 자제 못지않게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식

으로 하는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 그 자체이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잘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은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창작물이 창작자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인류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한껏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며 활력이 넘칠 것이다. 고귀한 생각과 고결한 감정을 더욱 북돋워주게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 더욱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와 같은 활동들은 국가가 조직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풍요로운 사회는 전부 국가로 조직되어 있고, 국가가 없는 사회는 전부 극도로 궁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있다.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반(反)국가 이데올로기는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공식 통화에 등을 돌릴 테니 국가가 주관하는 국정 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갈아치울 것이다”, “새로 출현하는 각종 인터넷 편의 도구를 갖춘 슈퍼맨 같은 개인들이 저마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므 로 국가가 강제하는 규제는 무시당하거나 무력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사되는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이 공간적으로 제약되는 국민 국가를 갈아치울 것이다”, “산업세계의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대한 전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윤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더 우월할 것이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

신만만한 미래상이다 .

이들의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기술적 조류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3차원 가상현실 공간을 말한다. 기실 메타버스는 기술결정론자들의 꿈의 공간이라 할 만하다. 메타버스를 기술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인류의 해방을 돕는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읽히게 마련이다. 인종, 성별, 나이, 외모, 국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의 공간이자 역사적 고통과도 단절할 수 있는 이상적 도피처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획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고 도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이슈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995년 리처드 바브룩 등은 메타버스의 탄생이 왜 세계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열망이자 필연일 수밖에 없는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바브룩은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향하는 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는 정보테크놀로지가 개인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며, 또한 국민 국가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현존하는 사회적·정치적 및 사법적 권력구조는 자율적인 개인과 그들의 소프트웨어 사이의 제약 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대체되면서 사라질 것이다." 실제 유명 기업의 임원인 존 카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가상현 실(VR)의 언약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메타버스 예찬론자이기도 한 그는 기술기업들이 창조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고통 없는 인류,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아바타처럼 자신의 모습을 언제든 변형할 수 있고 실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와 제약, 갈등과 고통과 이별할 수 있기에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미 연방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하게 조여오고, 애플과의 경쟁에서 패한 뒤로 메타버스 기술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페이스북의 눈에 현실세계는 너무나 비대한 국가권력이 자유를 옥죄고 있고, 회사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눈엣가시 같은 경쟁기업들이 많기에 자신만의 메타버스에서 그들만의 통치체제에 따라 유토피아적 가상 행성을 만들려는 욕망을 불태우는 중이다. VR의 침체기를 넘어 더 막대한 자본이 투

입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기술세력이 권력을 쟁취하고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해방구일 수밖에 없다. 그 공간에서는 정부에 불려 다닐 일도 없고 정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행성이다.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가 페이스북 특유의 반국가주의적 철학으로 스며들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 마케팅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제시문 3〉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人格)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던,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던,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本人)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홉스가 말한 국가의 본질이다. 홉스는 이 인용문에 이어서 국가를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각자가 그 인격이 하는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권력을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신의계약에 따라 설립된 '인위적 인격'으로, 평화와 공동방위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힘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

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혹은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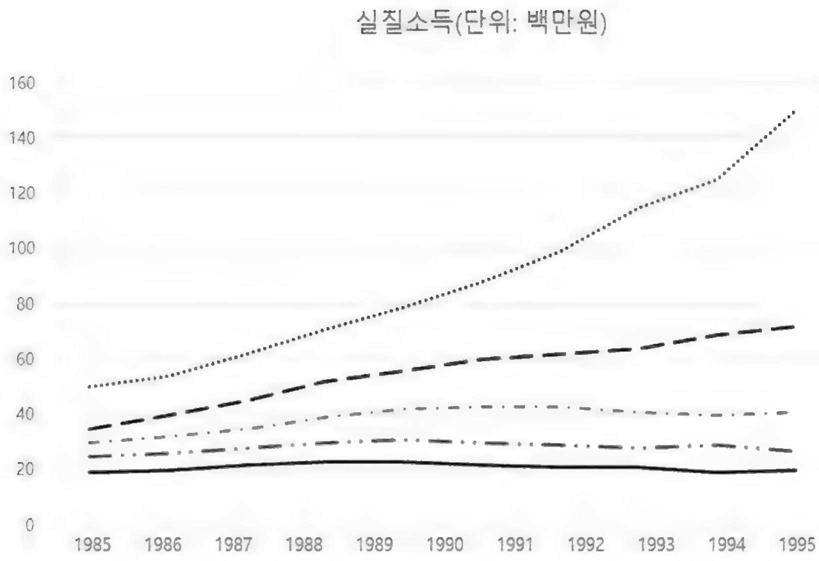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국민들이 신의계약을 통해 그들의 모든 권력을 대표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설립된 주권 곧 국가권력은 절대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주체적으로 합의하였고, 계약의 주체로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러한 논거들에 기초하여 절대주권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절대주권론의 옹호는 사회철학자들이 홉스를 비판하는 요점의 하나이다. 홉스 자신도 이렇게 지나치게 강력한 절대주권에 대한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절대주권론을 옹호하는 홉스의 답변이다.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정념은 너무나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권력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으므로, 주권의 절대성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대주권론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도구적 이성관에서 도출된 논리적 귀결이며 다소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오늘날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 2 **아래 <사례1>과 <사례2>를 토대로 [문제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40점)**

<사례 1>

국가 A는 '작은 정부' 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85년도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전격 시행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10년 동안 국가 A에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1>



* 주 : 그림의 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뉘어서 분류한 계층을 의미.
5분위는 최상위 20%, 1분위는 하위 20%를 의미함.

<사례 2>

전통적으로 민권보다 국권이 우위에 있던 국가 B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 우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신규 특허출원 건수도 급증했다. 또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어 공업중심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문제 3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시오. (20점)

사회적 관계

_ 경희대 모의

문제 1 **제시문 [가]~[라]를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문제 2 **제시문 [가]에서 제기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나]~[마]를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1,101자 이상~1,200자 이하]

[가]

인터넷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곧 실제로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와 동일한 의견만을 선별적으로 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과 집단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네티즌은 자신이 읽고 싶은 정보만을 골라 읽고, 듣고 싶은 의견만을 선택하여 듣고, 자신과 비슷한 취향과 견해를 지닌 사람들만 만나 소통하면서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을 공유하고 그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도덕적 지지(moral and social support)를 획득한다. 이런 상황은 인터넷이 다양한 정보와 견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기에 실현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의 생각이나 태도와 부합하는 의견만을 골라 접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like-minded people)끼리 만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만족감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개인의 자아실현 및 권리증진 차원에서만 본다면 물론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

면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와 의견의 편식으로 인해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력이 약화되며, 사회의 파편화를 심화시키고 집단 극화(集團極化 Group Polarization)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숙의와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평소에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지닌 무리하고만 지낸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의견의 정당성을 더욱 굳게 믿게 되며, 그 결과 반대 의견의 타당성이 드러났음에도 그 의견을 인정하거나 포용하는 데 인색한 경향을 보인다.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인터넷 공동체는 마치 울림방(echo-chamber) 같아서 자유롭게 소통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의견만을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 울림 효과는 보강 효과로 이어지고 구성원의 편견과 아집은 더욱 견고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제대로 이끌어 내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유유상종의 원칙에 따라 모인 집단 내의 소통은 기존 의견의 극단화를 초래함으로써 집단 극화 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듯 파편화된 집단 내의 유유상종식 소통은 집단 내 의견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인터넷상에는 이런 상호 대립적이며 이질적 집단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집단 간의 의견 다양성은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집단 간에는 다양성의 풍요가, 집단 내에서는 다양성의 빈곤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적 소통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나]

부산의 한 동네. 아이들이 하교한 빈 교실에 막 퇴근한 엄마·아빠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중이다. 입주할 집의 마감 공사를 앞두고 이날도 입주민 회의, 아니 조합원 회의가 열렸다. 공동주택 이름은 '일오집'. '14+1'에서 따왔다. 14가구가 모여 살면서 1채의 공동 공간을 함께 꾸려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얼핏 평범한 빌라처럼 보이는데, ㄷ자형으로 배치된 건물 가운데 330㎡(100평) 가까이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색다르다. 주차장일까? 아니다. 아이들이 뛰놀게 될 마당이란다.

이 집의 특징은 또 있다. 건물 두 채에 들어설 열네 집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실면적 기준으로 46㎡(14평)에서 106㎡(32평)에 이르기까지 규모부터 제각각이다. 중대형 아파트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좁게 느껴질 수 있는 평수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 공간(집)을 조금 좁게 쓰는 대신 1층에 배치할 공동 공간(커뮤니티실, 창고 등)은 넓게 쓰자는 것이 이들의 기본 구상이기 때문이다. 대신 개인 공간은 한껏 개성을 살렸다. 복층 구조를 갖춘 집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 뚫린 창(천창)을 낸 집, 테라스를 거실과 부엌 사이에 둔집 등 구조와 설계가 제각각이다.

기존 공공주택은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왔다. 뉴타운이건 임대 주택이건 마찬가지였다. 마을과 이웃이 사라진 자리, 건설사가 분양한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은 낯선 주거지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콘크리트 벽을 맞댄 채 살아가야 했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협동조합은 다르다. 서로 몰랐던 사람들일지라도 집을 짓겠다고 모여 부대끼는 과정에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 ○○○ 씨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한 대연동이라는 마을 또한 소중하다"라고 말했다. 정든 마을과 이웃이 있어야 진짜 좋은 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집을 짓게 되면 건설사의 일방적 드라이브도 불가능해진다. 조합원이 원하는 설계·자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집,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집을 만드는 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집에 저당 잡혀 사는 삶을 지긋지긋해 하면서도 막상 집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이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일오집을 통해 새로운 집의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

[다]

모든 과도기적 현상들, 적응과 부적응, 선도와 지체의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현시대가 지향해 가고 있는 발전의 방향은 가정, 직장, 사회, 국가, 그리고 전세계적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개인성과 공동체적 시민성의 동시적 신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혹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성의 신장이 개인화된 전자 미디어 보급과 맞물

리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고립감과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된 생활양식, 즉 "이중적 사사화(double privatization)"를 가속화시키거나, 공적 생활과 단절, 자신에만 몰두하는 "사회적 파편화(social segmentation)"의 어두운 모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개인성과 공동체적 시민성의 관계를 수평선상의 대립적인 양극 관계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개인성과 공동체적 시민성은 건강하면서도 자기 조절적인 자아에 토대를 둔 집단 정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실현되고 이것이 다시금 하나의 주체적 개인이 탄생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위한 상보적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인성의 확장과 공동체적 시민성의 신장은, 점차 개선되는 노동 및 삶의 조건, 그리고 정보화 추세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받고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 가는 등권적인 다원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들은 카스텔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로 요약된다. 이는 주체적 개인의 탄생과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의 집단이 파편화된 개인으로 깨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체계의 수직적 권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함과 동시에, 건강한 집단 정체성의 생산과 수평적 네트워크의 확장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해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

도시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한 가지 특징만은 변함이 없다. 그 어떤 도시들도 결국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밀접하게 머물면서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 말이다. 끊임없이 낯선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생활에 엄청날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다시 말해 이처럼 낯선 사람들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수많은 불안의 원천이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분출될 수 있는 수많은 공격성의 원천이기도 한다.

또한 낯선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 느끼던

공포들을 배출할 수 있는 편리하면서도 유용한 수단을 준다. 우리는 우리 집과 우리가 사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쫓아냄으로써 불확실성에서 유래하는 불안감이라는 무서운 유령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떨쳐내려 한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공동생활의 양식을 찾는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가 바로 '믹소포비아(Mixophobia)'다. 믹소포비아, 즉 뒤섞임에 대한 공포증(이질 공포증)은 다양성과 차이로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에 유사성과 동일성으로만 이루어진 섬들을 세우려는 충동으로 나타난다. 믹소포비아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 때문에 생겨난다. 어쩌면 "서로 비슷해지려는 욕망을 표현하는 '우리'라는 그 감정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더 깊이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회피하게 하는 방식"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라는 그 감정은 어떤 정신적 안정감을 보장한다. 실제적인 참여 활동을 회피하려는 욕망은 본래부터 공동체라는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내재해 있다. 공통된 경험도 없이 서로 공통된 유대감을 느끼는 일은 우선 사람들이 참여 활동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 활동이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위험성과 모험을 두려워하면서 그 활동이 가져올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처럼 "유사성을 지닌 공동체"를 추구하려는 충동은 사실 단지 외부에 있는 나와 '다름(the otherness)'으로부터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납게 요동치듯 활기 넘치며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번거롭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내부 상황으로부터 철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후인 셈이다.

낯선 사람들이 갈수록 더 이질적이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면 될수록, 더구나 우리 자신들의 생활 세계 안으로 그들의 특이함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결국에는 그러한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점점 더 희미해지거나 전혀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 될수록, 낯선 사람들은 항상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기 쉬운 법이다. 동질적이면서도 영토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하려는 충동은 믹소포비아에 의해 더 촉발될 수 있다. 더구나 이처럼 영토적인 분리를 생활화하는 일이야 말

로 믹소포비아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멍 튜브이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원천이다.

[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부터 비디오카메라에 노출된다. 주차장에도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며, 직장에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있고, 현금 지급기와 편의점에서도 비디오에 노출된다. 그런데 같은 비디오카메라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내 비디오카메라가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비디오카메라는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장면도 우연히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해 촬영되어 기록에 남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촬영되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짐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동일한 기술이, 권력이 우리를 감시하는 데에도, 역으로 우리가 권력을 감시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논제 5

50분

갈등의 해결

_ 서강대 모의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3] 5강

문제

[가]의 상황을 [나]~[라]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마]~[사]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800~1,000자]

[가] 2013년 2월의 일본 도쿄. "조선인을 없애는 일은 해충 구제와 같다", "죽여라, 죽여, 조선인!" 한국 음식점과 한류 가게가 밀집해 있는 신오쿠보 한인타운에 재특회의 혐한시위대가 무시무시한 팻말을 들고 몰려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즈음 "차별하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든 또 다른 시위대가 이 혐한시위대에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차별 시위에 반대 서명을 받는 시민들, "사랑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나눠주는 시민들, 혐한시위대를 향해 춤을 추며 조롱하는 시민들, 어느 순간 이 대항시위대가 혐한시위대를 압도했다.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다. 혐한시위가 있을 때마다 대항시위대가 맹활약을 했다. 주저앉아 혐한시위대를 막기도 했고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했다. 2013년 9월 22일에는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차별철폐 도쿄 대행진'에 나섰다.

-『말이 칼이 될 때』

[나] 심리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노한 여성 사진과 곱셈 문제를 통해 확인된, 두 가지 사고 모드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 둘에 여러 이름을 붙였다. 나는 키스 스타노비치(Keith Stanovich)와 리처드 웨스트(Richard West)가 최초로 제안한 용어를 수용해 머릿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부르겠다.

- 시스템 1 : 거의 혹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통제에 대한 감각 없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한다.
- 시스템 2 : 복잡한 계산을 포함해서 관심이 요구되는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에 관심을 할당한다. 활동 주체, 선택, 집중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작용하는 경우도 잦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모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활성화된다. 시스템 1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시스템 2는 편안한 보통 상태에서는 별 노력을 요하지 않고 역량의 일부만 가동한다. 시스템 1은 시스템 2를 위해서 인상, 직관, 의도, 느낌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한다. 시스템 2의 승인을 받으면 인상과 직관은 믿음으로 바뀌고, 충동은 자발적 행위로 변한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때, 시스템 2는 거의 혹은 전혀 수정 없이 시스템 1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느낀 인상을 믿고, 자신의 바람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양호하다.

그러나 시스템 1이 어려움에 빠지면 시스템 2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처리 지원을 요청한다. 시스템 1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는 시스템 2가 가동된다. 갑자기 17×24 같은 곱셈 문제를 접했을 때 그러하다. 또한 시스템 1이 유지하는 세상의 모델을 위배하는 특정 사건이 감지되면 시스템 2가 활성화된다. 놀랄 때마다 의식적으로 집중력이 극대화하는 경험은 다들 해봤을 것이다.

-『생각에 관한 생각』

[다] 1952년에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스워스모어 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몇몇 지원자들이 인간의 지각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다. 사회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Solomon Asch)는 단순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커다란 카드를 준비했는데, 한 카드에는 세로로 직선 하나가 그려져 있고, 다른 하나에는 비슷한 직선 셋이 그려져 있다. 지원자에게 두 카드를 보여준 다음에, 세 줄 중에 어떤 줄이 다른 카드에 그려진 한 줄과 길이가 같은지 질문한다. 세 줄이 그려진 카드에서 다른 두 줄은 길이가 크게 달라서 누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속임수를 두었다.

'지원자' 중에는 애시와 미리 짜고 들어온 가짜들이 섞여 있었다. 애시는 실험에서 가짜 지원자들이 줄지어 나와서 하나같이 아주 큰 목소리로 답을 말하게 한 다음에 진짜 지원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때때로 애시는 가짜 지원자들에게 똑같이 틀린 답을 말하게 한 다음

에 진짜 지원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런 속임수를 쓰지 않은 대조 실험에서는 틀린 답을 말하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쉽게 바른 줄을 찾아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조리 틀린 답을 말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는, 지원자가 다수와 똑같이 틀린 답을 말하는 때가 많았다. 그들은 주저하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눈을 비비고 카드를 노려보다가 자기가 알아본 것을 포기하고 다수를 따랐다. 몇몇 사람들이 소리 내어 틀린 답을 말하기만 해도 멀쩡한 사람에게 틀린 답을 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적 원자』

[라] 구체적 사례, 그러니까 노예제에 대한 논증을 살펴봅시다. … 내가 노예 소유주고 당신은 노예제에 반대합니다. 내가 노예제를 지지하는 이런 논증을 합니다. “가령 당신이 차를 임대하고 나는 소유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차를 더 잘 관리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차에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차를 더 잘 관리한다. 당신은 차를 잘 돌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차에서 소음이 나면 당신은 허츠 렌터카 회사에다 차를 돌려주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차를 소유한 나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 두려워 자동차 정비 센터를 찾아간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차를 소유한 나는 차를 임대한 당신보다 더 많이 차에 신경 쓴다. 이야기의 각도를 약간 바꿔서 나는 사람을 소유하고 있고 당신은 임대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더 잘 돌볼까? 논리의 등가성에 비추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돌볼 것이다. 따라서 노예제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도덕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노예제는 사람을 소유하는 제도고 그래서 소유주는 노예를 훨씬 잘 돌본다. 자유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사람을 빌리는 제도다. 만약 당신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람은 빌리면 되고, 그런 만큼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을 사용하고 배터리가 다 되면 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한다. 그래서 노동의 자유시장은 완전히 부도덕한 반면, 노예제는 상당히 도덕적이다.

노예 소유주는 이런 도덕적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상당히 괴상하다고 여길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괴상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걸 괴상하다고 판단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노예 소유주가 공통적인 도덕적 터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도덕적 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이해하고 그 때문에 더 이상 선악의 문제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 · 촘스키, 사상의 향연』

[마] 삶은 정치적이다. 세상이 우리의 기분을 살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사소한 선택들은 그 자체로 일종의 투표 행위다.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장래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일상의 정치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또는 말과 행동의 부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20세기 몇몇 극단적인 (그리고 덜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부농(富農)은 선전 포스터에서 돼지로 그려졌다. 인격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미지는 농촌이라는 배경을 고려할 때 분명히 도살을 암시한다. 때는 1930년대 초로, 당시에 소련은 시골을 장악하고 그 자본을 뽑아내 단기 집중 산업화에 투입하려고 했다. 남들보다 땅이나 가축을 더 많이 가진 농민이 가장 먼저 재산을 잃었다. 돼지로 묘사된 이웃의 땅을 빼앗는 데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었다. …

… 독일에서는 나치가 권력을 잡았다. 승리를 만끽한 나치는 유대인 상점에 대한 불매 운동을 조직했다. 처음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가게에는 〈유대인〉이라고, 또 어떤 가게에는 〈아리아인〉이라고 유리창과 벽에 표시를 하자, 독일인들의 가정 경제학에 관한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유대인〉이라고 쓰인 가게에는 미래가 없었다. 그러한 가게는 탐욕스러운 음모의 대상이 되었다. 재산에 종족이 표시되면서, 시기심이 윤리를 바꿔 놓았다. … 가게에 〈유대인〉이라고 쓴 독일인들은 실제로 유대인의 소멸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멀뚱히 서서 지켜보기만 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표

시를 도시 풍경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미 끔찍한 미래와 타협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충성의 상징을 드러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러한 상징이 동료 시민을 배척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라.

-『폭정』

[바]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그에 따라 가치의 충돌로 인한 갈등도 예전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담론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담론 윤리의 대표자인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담론 절차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올바른 대화의 기준으로,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성실히 지킬 것을 믿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담론을 통해 우리는 이성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도덕규범에 합의할 수 있고, 그 도덕규범에 따라 윤리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윤리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 · 경제 체제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시민의 의사를 공적인 의사 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소통을 위한 체계적 절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사] 사르트르는 키르케고르와 달리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라, 이 세계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할 정해진 목적이 없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라

고 말한다. 미리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은 매 순간 주체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실존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 즉, 인간은 자신이 원하건 원치 않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로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관련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이러한 실존의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킨다.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사르트르는 이것을 불성실이라고 보았다. 불성실은 자유와 주체성을 부정하면서 기존의 관습, 고정된 법칙이나 원리, 또는 신과 같은 존재에게 순응하는 자세이다. 그래서 그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강조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논제 6

90분

바람직한 공동체 _ 한양대 기출

문제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 드러난 두 입장에 깔려 있는 사고 틀의 한계를 비판한 뒤, (다)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과 그 사례를 제시하시오.

(1200자, 100점)

(가)

근대 이전 전통 사회의 도덕 체계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성을 판별하고 유덕한 행위자의 형성에 관심을 갖는 A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와 같이 구성원들이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회는 도덕의 구속력이 높아 A 윤리가 번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대두된 시민 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와 달리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A 윤리로는 사회 통합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다원화된 사회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덕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B 윤리가 대두되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새로운 도덕 체계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고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B 윤리는 각자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건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도덕적 요구 사항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금지 사항들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런데 A 윤리는 주관적 성격이 강해 행위의 유용한 지침이 되기에 불확실했다. 그래서 B 윤리는 그러한 A 윤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다원성에서 생기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의 도덕적 결정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B 윤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그 이전의 도덕 주체의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더군다나 규정된 의무 사항이나 금지 사항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들이 있음을 간과하고 말았다. 또한 B 윤리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며, 그것이 왜 정당한가에 대한 논거 제시에만 몰두하여,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 부여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의무와 동기 사이의 부조화와 갈등, 즉 해야 하는 것과 행함 사이의 괴리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앎과 실천 또는 말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최근 A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도덕 체계를 검증한다. 하나는 도덕 체계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고 합당한지의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 체계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과 실현성 여부이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A 윤리보다 B 윤리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B 윤리는 인간의 도덕적 삶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의무 이외의 영역을 경시하게 되고 개인의 도덕적 창의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 선택 상황에 당면했을 때 딜레마에 봉착하여 고심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갖가지 유혹이나 외적, 내적 장애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나)

최근의 핵 폐기장이나 소각장 건립 문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 등은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과 집단, 공동체 간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 폐기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과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어딘가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 폐기장을 건립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줄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갈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이익이 공익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도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사회도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공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번영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사회를 벗어난 개인은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흔히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한다. 유기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별개의 의도를 갖고 개별적으로 작용한다면, 사회는 이미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오늘날은 다원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혈연 및 친족관계 등에 기초한 단일 공동체가 일반적이었던 예전의 도덕규범이 오늘날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과거의 윤리가 "우리가 남인가?"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면, 오늘날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이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같은 층 주민들이 우연히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 탈 경우, 서로는 얼마나 어색해지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이상, 주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갖가지 의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액수의 관리비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해야 한다든가, 정해진 날짜에 분류한 재활용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든가 등의 규정이 그 좋은 실례들이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남'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촌', 곧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는 이 아파트촌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그리고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놀이터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작은 공원길에 오물이 가득하다면, 나아가 윗집에 홀로 살고계신 할머니가 사망한 지 몇 주 만에 발견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논제 7 100분

시민참여

_ 성균관대 기출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 [논리논술3] 7강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4>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 시민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플라톤은 민중의 정치 참여에 독성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 독성을 제거할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 민중의 어리석음, 경험 부족, 비전문성, 그리고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국가를 근본에서부터 좀먹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다수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정부형태를 민주정과 과두정이라는 두 가지 근본 유형으로 나눴다. "가난한 다수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이고, 부유한 소수 귀족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과두정이다." 과두정에서는 시민 몇 명이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반면, 민주정에서는 시민 전체가 모든 공무를 결정한다. 후자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무에 관여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정부형태로 여겨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 정부는 시민단의 전권 통치라는 원칙, 즉 시민들의 뜻이 언제나 법 위에 있고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칙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통치자의 수에 상관없이, 즉 정치체의 형식이 무엇이든, 공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올바른 정부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가 온갖 이해관계들이 무질서하게 충돌하는 싸움판으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여, '잘못된 정부'를 제거하고 '올바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아테네가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시민의 뜻에만 따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철학적 이성의 토대를 갖춘 법의 지배에 종속되기를 원했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가 나타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민중이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정치인을 알아볼 판단력조차 결여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서 무도한 선동가에게 권력을 쥐여 준다고 염려했다. 이 경우 국정이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가가 쇠퇴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과 입법자들의 이른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 다수 시민의 변덕스럽고 불합리한 결정을 대비시키는 전통은 플라톤에게서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나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이 전통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

〈제시문 2〉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가리키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그 단어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의제 원칙에 따라 선거로 정부와 입법부를 선출하긴 하지만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다른 형태의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하는 체제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역사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을 거치면서 대의제, 투표, 선출된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드높여졌다. 보통선거권이 민주적 정부의 표준적 양상이 되었고, 이러한 대의제 체제에서 시민들은 종종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들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준다. 그들은 선출된 대표뿐 아니라, 훨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행정가, 관료, 공직자, 판사, 넓게는 국제기구들에까지 권리 행사를 위임한다. 이에 따라 대표들과 각 분야 엘리트가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이 결국 국가를 ‘사실상의 귀족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문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투표권이 소수의 전유물에서 모든 성인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되는 역사가 각종 운동과 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반과 입법부를 보통선거권에 따라 선출하는 제도가 다수 국가에서 확립된 후에는 민주정 내에서 대의제가 갖는 한계가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기에 이르

렸다. 민주국가의 대의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나온다. 선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선거운동이 종료되면 후보들은 소위 주권자들을 개의치 않는다. 자신의 투표가 정부의 방침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시민들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정치적 효능감을 상실하는 징후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다수결 규칙을 따르는 한, 대표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폭정을 제도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서사에 대해 사람들이 품어왔던 환상이 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정치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데서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의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정치체제의 집회가 분명 유리하다. 단위가 작을수록 참여의 잠재적 가능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큰 단위에서도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현대 국가에는 타국보다 크건 작건 일련의 독자적인 결사체와 조직, 즉 다원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나라가 큰 경우에는 작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기존의 대의제를 넘어서는 정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문화다양성의 수용 문제가 불거지면 더욱 많은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곪지 않도록 오히려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표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잠재적 쟁점들을 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실성이 높은 정책 대안들을 따져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어야 하고, 그런 토론을 현실 정치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술을 고민해야 한다. 보통의 시민이 지역사회나 국가 같은 단위 내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면, 이는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본적 신뢰가 크게

잠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의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정치적 신뢰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시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시문 3〉

학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면 백성들은 서로에게 후하게 대할 것이고, 이득만 보여주면 민간의 풍속은 각박해질 겁니다. 각박해지면 도리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위배하고 이익되는 일만 추구할 것입니다. 도덕과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이 횡행해서 예의가 파괴되고, 간사한 사람들이 활개치며 나랏일에 참여하는 상황을 두고 인(仁)과 의(義)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 혼란의 싹입니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길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낳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여 군주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중시하며 예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속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학자집단은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군사가 죽을힘을 아끼지 않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군주 섬기기에 열중하여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실익과 녹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무리 인과 의를 부르짖었어도 백성들이 교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가와 묵가들은 속으로는 탐욕스러우면서 겉으로는 마치 욕심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데, 이 또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리사욕을 가지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백성이 선하다고 전제하지도 않고, 저절로 착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성인(聖人)이 어느 정도 백성들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본바탕은 바꾸지 못합니다. 내적인 자질이 없는데 글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스승과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이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은 방향

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백성을 엄격한 상과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상벌은 성인이 시대에 맞는 옳고 그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질서가 바로잡힌 세상과 혼란한 세상을 잘 관찰하여 정한 것입니다. 이를 따르기만 하면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정의감과 동정심만 앞서면 당장은 자신들이 가진 입을 것, 먹을 것 나누기를 안일하게 즐기겠지만, 막상 흉년 등의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서로에게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우선시하면 처음에는 욕심을 절제해야 하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간사한 꾀로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함부로 정치에 참여하여 혼란을 초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혼란을 막고 백성들이 잘 따르게 만들면 백배의 이익을 남기는 국가적 사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백성들도 기꺼이 세금을 낼 것입니다. 넉넉한 국가 재정으로 각종 제도가 완비되고 식량도 여유 있게 비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제시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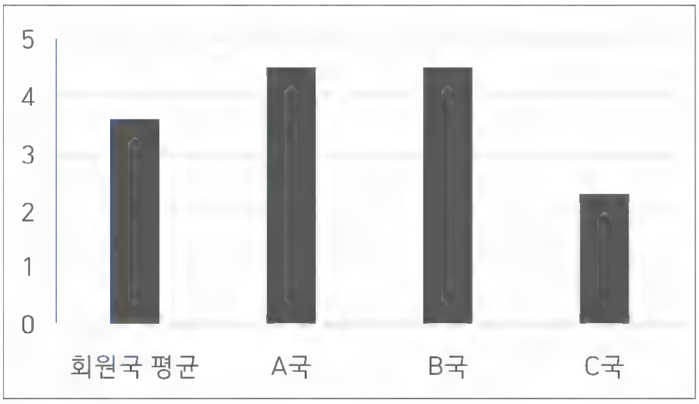
법을 위반하려는 저희의 뜻에 대해 다들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만도 합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한 1954년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촉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다른 법률을 의식적으로 어긴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고 역설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일부 법을 어기면서 다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적극 옹호할 것입니다. 사람은 정당한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고양하는 법은 정의로운 법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든 법은 부당합니다. 인종 분리는 영혼을 왜곡하고 인격을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분리법은 부당합니다. 분리된 사람들에게 거짓된 열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법이란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규범으로서, 정작 다수는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이를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한 법은 다수가 스스로 기꺼이 따를 규범을 소수에게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성을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소수에게 부과된 규범으로, 그 소수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종 분리법을 제정한 앨라배마(Alabama) 주 의회가 정당하게 잘 선출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앨라배마 주 전역에서는 흑인이 유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흑인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정작 유권자로 등록된 흑인은 단 한 명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법이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그 적용은 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금요일에 허가 없이 행진한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행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조례가 인종 차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권과 공공선을 위한 양심적이고 평화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도 광적인 분리주의자처럼 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 하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냥 억누르기만 해서는 소수를 억압하는 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을 믿고 만인을 위한 판단에 따라 부당한 법을 어기려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기꺼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법률을 어기고, 그 부당함에 대한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에 갇혀 기꺼이 형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야말로, 사실 법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 2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본가치로 공유하는 전 세계 40여 국이 가입된 국제기구에서 매년 각국 시민들의 사회 활동 경험 및 사회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세 국가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1] (40점)**

주1)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 C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자료 1> 사회 활동 경험[2]



주2) 국민청원, 정책공청회, 서명운동,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종합하여 0(최저)~5(최고)점으로 나타냄.

<자료 2> 사회지표

항 목	회원국 평균	A국	B국	C국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년)	9	4	12	9
정치 효능감[3]	36	47	46	21
의견 대립 지수[4]	34.1	55.3	39.3	40.5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5]	3.2	6.4	3.1	2.3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인구 만 명당)	0.6	2.4	0.6	0.3
정부 효과성[6]	1.5	0.9	1.7	2.3
좋은 나라 지수[7]	0	-3	4	-2

주3) 시민 스스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의 강도
(최소 0, 최대 50).
주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른 정도
(최소 0, 최대 100).
주5) 사회적으로 표출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6)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최대 2.5).
주7)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을 종합한 회원국 간 비교 평가 지수
(최소 –10, 최대 10).

문제 3 **D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학생이 D국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지 또는 반대할지 오직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예시답안은 복습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답안을 미리 보고 문제 푸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 자신의 답안을 먼저 쓰세요.

1강 공정하다는 착각 _ 숙명여대 모의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나〉는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부합한다. 코넌트는 세습 엘리트 체제를 무너뜨리고 누구나 사회이동이 가능한 계급 없는 사회를 지향했다. 그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학생이 가정 형편이나 부모의 신분, 소득과 무관하게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다〉는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표〕는 가계소득과 SAT 점수가 비례하며, 〔그림〕은 소득계층 간에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이 상당한 격차가 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부모 소득과 같은 외적 요인이 자녀의 학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3자)

[문제 2] [결소대결 구조]

〈가〉의 논지와 〈다〉를 바탕으로 본다면, 〈나〉의 '능력주의 쿠데타'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 〈나〉의 능력주의 쿠데타는 부모의 신분, 경제력과 무관하게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 간 사회 이동성이 활발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다〉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이,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가 속한 가계와 부모의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므로, 능력주의 쿠데타는 미국의 교육 현실에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코넌트의 노력이 세습 엘리트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과 같은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지능과 재능, 노력에서조차 우연적 요소가 있음을 간과했다. 즉, 교육에서 경쟁을 통해 획득된 특정 개인의 성과가 사회 경제적 이익으로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불평등을 완화하는 차등 원칙 또한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까지 함께 고려할 때, 능력주의 쿠데타가 의도한 공정한 기회균등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633자)

[문제 1] ○ 대학발표 예시답안

이상과 현실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가), (라)의 인물은 이상지향형 인간으로, (나), (다)의 인물은 현실지향형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의 커즈와일은 인공일반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오면 인류의 이상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 이상지향형 인간이다. (라)의 왕망은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유교적 이념을 토대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 이상지향형 인간이다. 반면, (나)의 마키아벨리는 가상국가에 대한 논의가 현실 조건을 간과했음을 비판하면서, 군주에게는 현실에 따라 악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현실지향형 인간이다. (다)의 방삼복은 모두가 기뻐하는 해방의 순간에도 오직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만을 따진다는 점에서 현실지향형 인간이다. (396자)

[문제 2] ○ 선생님 예시답안

〈보기〉는 기본적으로 섞이기 힘든 식초와 식용유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빗대어 설명한다. 식초와 식용유는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분리되기 때문에 좋은 드레싱을 만들려면 둘을 섞어야 한다. 이처럼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라)의 왕망과 (마)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 이상이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가의 차이를 보인다. (라)의 왕망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이상만을 추구하다 실패한 인물이다. 왕망은 유교적 이상주의 실현을 위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현실 조건을 무시한 결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결국 개혁에 실패했다. 반면, (마)의 경제학자들은 현실에 기반한 이상주의의 좋은 사례다. 경제학자들은 유토피아의 실질적 조건인 물질적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이론을 제시했다. (453자)

[문제 3] ○ 대학발표 예시답안

인권보호단체 W는 이상적으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정권을 비판하면서 기아 및 전염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재국가 A를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할 경우, A국 어린이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W는 결국 비판 성명에 동참하는 대신 A국에 입국하여 어린이들을 돕기로 결정한다. W가 내린 현실적인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용하여 그 타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W의 결정은 어린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한다. 둘째, 국제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A국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에 부합한다. 셋째, 입국해서 활동하는 것 외에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한다. 넷째, 공동성명에 동참해서 얻는 이익보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킨다. (494자)

◯ 선생님 예시답안 [대학답안 수정]

[문제 1]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문 1〉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제시문 2, 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시문 1〉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관점은 물론이고 각자의 욕망이나 충동도 각자의 인간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되므로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해야 스스로에게 가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 연대의 끈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성의 존중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 3〉은 국가의 간섭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초래되는 무질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홉스는 절대주권론을 통해, 국가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인위적 인격으로서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다고 본다. 물론 강력한 절대주권이 주는 불편함은 존재하지만, 지배자가 없을 경우 초래되는 무질서로 인한 비참과 공포, 약탈과 분열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오늘날에도 타당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제시문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의 간섭과 견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의 조류인 메타버스 기술을 장악한 자본은 국가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유토피아적 기획을 통해 자신들이 인류를 완벽히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는 국가의 간섭이 없어져서 공적 기능이 약화될 경우 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 등은 물론이고, 거대 자본에 의한 무질서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975자)

[문제 2]

〈사례1〉은 국가A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결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A는 국민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소득수준 최상위집단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집단들은 실질소득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 정책을 10년 간 지속한 결과 소득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의 격차는 크게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보장을 중시하며 국가 개입을 비판하는 관점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은 부유한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승자독식 사회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료를 통해 실리콘밸리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허상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율적 개인들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인류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이윤을 무한대로 추구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부여하면 결국 약탈과 분열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보장을 통한 인류 전체의 평화와 풍족한 삶의 실현은 이상론적 주장일 뿐이다.

〈사례2〉는 국가B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국가 B는 규제와 통제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변화를 통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공업의 비중이 농업보다 큰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관점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권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지만 자율적 개인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국가 주권은 절대성을 지닌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욕망이 내포하는 순기능을 간과한 주장이다.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율성과 개별성이 충분히 신장되면 차별과 불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강해질 수 있다. (1,233자)

[문제 3] 찬성 입장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찬성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겨두면 결국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을 매개로 한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갈등과 불평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일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물론,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개인의 개별성이 훼손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창의성의 저하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되는 것을 개인의 창의성이라 옹

호할 수는 없다. 투기 방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까지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반국가주의의 모습일 뿐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서 그 절대성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다만, 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해야 하고,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655자)

[문제 3] 반대 입장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반대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인간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발달은 인간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 부동산 시장 역시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경우 투기 등의 혼란이 생기고, 부동산을 매개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과 충동도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간성을 이루는 요소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를 정부가 억압해서는 안 된다. 개별성이 발전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욕망이나 충동이 부동산 쪽으로 획일화 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당장의 부작용은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개별성과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때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게 될 것이다. (614자)

◯ 선생님 예시답안

[문제 1]

〔가〕~〔라〕는 사회적 관계 맺기의 방식에 따라 〔가〕, 〔라〕와 〔나〕, 〔다〕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가〕, 〔라〕는 내적으로는 통합되어있지만 외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파편화된 양상을 살피고 있다. 〔가〕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취향과 일치하는 정보와 관계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의 네트워크는 사회 파편화를 심화시켜 자신들의 의견만 극단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의견을 배타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낯선 사람들과 늘 부딪쳐야 하는 도시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뒤섞임에 대한 공포증인 '믹소포비아'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동질적인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반면 〔나〕, 〔다〕는 내적으로는 분리되어있지만 외적으로는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다양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조합원의 개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소통 및 공간을 동시에 확보한 예를 보여준다. 〔다〕는 인터넷 미디어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주체적인 개인성과 공동체적인 시민성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637자)

[문제 2]

〔가〕는 인터넷 기술로 인해 네티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접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파편화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질적 집단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이른바 기술결정론적 태도라 할 수 있다. 필연적인 발전 경로를 따르는 기술 변화에 의해 사회 전체가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마〕에서 알 수 있듯이, 비디오카메라는 개인을 감시하기도 하지만, 권력을 감시할 수도 있다. 인터넷 기술도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목적과 의지, 소통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며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인간의 의지가 (라)의 '믹소포비아'처럼 배타성을 추구하는 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낯선 사람들과 늘 부딪쳐야 하는 도시처럼 무한히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공포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질적인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인간의 의지가 발현된 모습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 안정감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파편화를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제 파편화된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인간의 출현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개인성과 공동체성은 배타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다〕에서 주장하듯이, 인터넷 기술은 개인성과 공동체적 시민성의 동시적인 신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평등한 공유와 등권적인 연대가 가능해짐으로써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인터넷만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실천적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처럼 서로 다른 개성과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할 때만이 독립적이고 성찰적인 개인으로 성숙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와 의견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다. (1,147자)

○ 선생님 예시답안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때로 그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서 충돌하기도 한다. 〔가〕에서 제시한 혐한시위대와 대항시위대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 이 두 시위대는 조선인과 한국, 한류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로 충돌하고 있다.

〔가〕의 상황은 〔나〕~〔라〕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두 시위대 간 지속적 갈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1과 노력을 동원한 시스템 2를 통해 각자의 견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류에 대한 자동적인 반감이 혐한시위라는 자발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혐한시위에 대한 자동적인 반감이 대항시위라는 자발적 행위로도 나타난다. 둘째, 다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 차별이라는 잘못된 판단과 행위도 다수가 동참하면 개인이 거기에 따르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혐한시위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도덕적 터전이 없는 주장을 비판하는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 의지가 발현된 것이다. 혐한시위대는 도덕적 논증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터전을 갖추지는 않았다. 인권을 지지하는 도덕적 터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논증에 더해 도덕적 터전까지를 갖추면 대항시위대의 입장이 성립하게 된다.

〔마〕~〔사〕를 고려하면, 〔가〕의 상황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추론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주체적 존재로서 나의 자유에 따른 선택,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별에 따른 피해와 책임을 인식하면 차별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개개인의 주체적 선택이 전제가 될 때, 일상의 정치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더욱 중요해 진다. 그러므로 동료 시민을 배척하는 혐한시위대의 말과 행동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담론 윤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한다. 담론 윤리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토대로 하므로, 차별을 조장하는 혐한시위대는 설 자리를 잃게 되어 갈등 상황이 해소될 것이다.

(997자)

○ 선생님 예시답안

(가)는 시대에 따라 변모해온 도덕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근대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A윤리가 중심이었지만, 근대 이후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보편성이 부족한 A윤리는 변화된 사회에 대응할 수 없었기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B윤리가 나타난다. B윤리는 절대적인 의무를 규정해서 다원성에서 생기는 갈등의 최소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B윤리가 지나치게 의무만을 강조하다보니, 주체의 동기와 의도를 간과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결국 B윤리가 갖는 의무와 동기 사이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A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시대와 현실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에 드러난 두 입장에 깔려 있는 사고 틀은 윤리적 가치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사고의 한계를 보인다. (나)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개인과 집단, 공동체 간에 첨예한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익을 우선하는 입장과 공익을 우선하는 입장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설명한다. 또한 이 글에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오직 이익만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익의 유무만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 역시 단편적인 사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사고의 틀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첨예화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상호 대립적 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호보완적 가능성과 호혜성의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뛰어 넘는 도덕성, 신뢰, 존중, 배려 등 다른 가치들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원적인 현대사회에서 각자의 차이가 충돌하면 갈등의 양상 또한 다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B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한 것이다. 내가 노약자가 아닌 경우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만 실행한다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 노약자석에 빈자리가 없는데 또 다른 노약자가 지하철에 탑승했다면 나는 마땅히 일반석의 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이것은 법칙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닐지라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동기이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합당한 A윤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B윤리로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 의무를 규정하되, 그것이 의무와 동기 사이의 부조화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A윤리가 보완될 때,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1,286자)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들은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1〉은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시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라고 본다. 또한 이들은 공공선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참여할 경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반면 철학자, 입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인간은 본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민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성인과 같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피력한다. 두 제시문은 시민의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참여의 한계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이 시민의 역량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강조한 반면 〈제시문 3〉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동기적 특성에 주목하고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2〉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 대표에 의한 정치는 일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며,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통해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피력한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책임에 근거하여 법이나 정책에 맞서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뜻한다. 시민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2〉가 대의제라는 정치 제도의 차원에서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언급하였다면,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이 사회 발전과 제도 개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89자)

[문제 2]

〈자료 1〉의 '사회 활동 경험' 그래프는 각 국가에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A국과 B국은 모두 회원국 평균에 비해 시민 참여가 높은 반면, C국의 시민 참여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다. 〈자료 2〉에 제시된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을 보면 회원국 평균이 9년인 것에 비해 A국은 4년, B국은 12년으로, A국과 B국은 시민 참여의 정도는 유사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어 참여의 성숙도가 다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 2〉의 사회지표를 보면, 시민 참여가 높은 A, B국은 C국에 비해 정치 효능감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시문 2〉에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 무력감에 빠지는 문제를 해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A국은 B국과 C국에 비해 의견 대립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높고,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A국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의 특성이 〈제시문 3〉에 언급된 사리사욕만을 중시하는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좋은 나라 지수 역시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시문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시민들의 참여는 국가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B국의 좋은 나라 지수가 다른 두 국가 및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제시문 2, 4〉).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은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회원국 평균과 A, B국에 비해 낮고 정부효과성이 높다. 이로부터 시민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으로 인한 문제나(〈제시문 3〉) 이기적인 시민들로 인해 이해관계가 무질서하게 충돌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제시문 1〉)은 적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갈등 관리 비용 지출을 줄이고 나라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2〉의 C국 의견 대립 지수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C국에서도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재된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좋은 나라 지수를 보면 C국의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갈등이 곪지 않도록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1,418자)

[문제 3] (1)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시문 2〉), 공공선 실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제시문 4〉).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 2〕의 A국 자료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사적 이익 간의 충돌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제시문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제시문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의 〈자료 2〉에서 정치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641자)

[문제 3] (2)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로써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시문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들에 대해 의견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기 쉽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료 2〉의 시민 참여는 높지만 의견대립, 지역 내 기피시설 건립 반대가 많은 A국의 높은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과 낮은 '정부 효과성'은 이러한 결과를 수치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2〉의 B국의 사회지표 결과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B국은 충분한 정치사회화 교육을 받은 시민 참여가 보장된 국가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제시문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충분히 교육받은 시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시민 참여의 역기능이 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정책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면 공공선을 위한 선택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즉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58자)

◯ 선생님 예시답안 (대학답안 수정)

[문제 1]

제시문들은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1, 3〉은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2, 4〉는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1, 3〉은 시민의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1〉은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시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라고 본다. 또한 이들은 공공선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참여할 경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반면 철학자, 입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제시문 1〉이 시민의 역량 부족의 원인을 교육이라는 후천적 요소로 파악하는 반면, 〈제시문 3〉은 이기적인 인간의 선천적 본성에 주목한다. 〈제시문 3〉은 인간은 본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민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성인과 같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피력한다.

반면, 〈제시문 2, 4〉는 시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2〉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 대표에 의한 정치는 일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며,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2〉가 대의제라는 정치 제도 보완을 위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면, 〈제시문 4〉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주장을 펼친다.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통해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피력한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책임에 근거하여 법이나 정책에 맞서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뜻한다. 시민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의해 건강한 사회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1,286자)

[문제 2]

〈자료 1〉의 '사회 활동 경험' 그래프를 통해 국가에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료 2〉는 각종 사회지표를 통해 세 국가의 시민 참여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서로 다른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입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국과 B국은 모두 회원국 평균에 비해 시민 참여가 높고, '정치 효능감'이 평균보다 높다. 이는 〈제시문 2〉에서 지적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 무력감에 빠지는 문제를 시민 참여로 해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B국은 '정치사회화 교육'을 의무교육 기간 내내 진행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그에 따라 '좋은 나라 지수'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은 표면적으로 '정부의 효과성'이 높지만, '의견 대립 지수'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재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낮은 '정치 효능감'이나 '좋은 나라 지수'를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갈등이 곪지 않도록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주장하는 입장도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견 대립'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높고, '주민 시위 건수'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4배나 높다. 이로부터 A국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의 특성이 〈제시문 3〉에 언급된 사리사욕만을 중시하는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좋은 나라 지수' 역시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시문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시민들의 참여는 국가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국의 경우 '갈등관리 비용'이 회원국 평균과 A, B국에 비해 낮고 '정부 효과성'이 높다. 이로부터 시민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으로 인한 문제나(〈제시문 3〉) 이기적인 시민들로 인해 이해관계가 무질서하게 충돌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제시문 1〉)이 적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 낮은 시민 참여가 오히려 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88자)

[문제 3]

→ 대학 답안 참고